

2차 북미정상회담 베트남서 개최

27~28일로 싱가포르 개최 1차 때와 달리 1박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며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에는 두 정상이 샌토스섬 카펠라 호텔에서 약 5시간동안 만나 대화를 나누는 뒤 헤어졌지만, 이번에는 회담 기간이 이틀로 늘어났다. 일정이 늘어남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하면서 깊이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개최국을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최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CNN은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의 어떤 도시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하노이와 다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특히 다낭에서 지난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린 적이 있는 만큼, 미국은 현지

의 치안상태에 대해 경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을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낭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인터컨티넨탈 호텔, 또는 하얏트 리조트 호텔이 회담장이 될 것

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경철 전 다낭 한인회장은 자유아시아(RFA)방송과의 지난 4일 인터뷰에서 "비밀리에 (미국 요원들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다. 최근엔 공안들이 베트남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보안 검색도 시작했다. 큰 정치 행사가 예정돼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낭에서 20년 간 거주해온 이 전

회장은 "외국 언론에서는 하얏트 리조트 호텔을 정상회담 예상 장소로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회담장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손트라 반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보안상 아주 유리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회담 장소로 적합하다는 게 이곳 사람들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북·미 실무협상 사전 협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 귀빈대기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법폐기물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 "군산 불법폐기물 조속히 처리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최근 반입돼 야적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일 김 의원은 군산시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환경부의 이동 명령 조치로 군산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된 불법 폐기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관영 의원은 "환경부의 방치대로 배출원이 확인되고 성분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군산지역 밖으로 반출 처리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후 불법폐기물 현황보고 자리에서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자들에게 유사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불법 폐기물 처리 업자들에 대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과 지난 5년간의 군산 공공처리장 폐기물 입출고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군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근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께 또 하나의 상실감을 크게 안겨드리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여야 청취 설 민심?... 경제 · 김경수 · 사법농단 · 국회 성도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기해년(己亥年) 설 명절 청취한 민심을 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한 문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해 사법개혁에 보다 확실하게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긍정 평가를 앞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이례적으로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써 해당 지역 지

민주당 "김경수 구속에 비판 여론... 사법개혁 주문 있어"

한국당, 김경수 연루 댓글 여론조작 진실규명 주장

야3당 "국회 정상화 시급...선거제 · 민생법안 처리 나서야"

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점에 대한 우려와 격정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민심을 전하면서 김 지사 구속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사법농단'으로 돌린 셈이다.

경제에 관해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많이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은 "재래시장·골목상권의 어려움, 하소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며 "임대료 부분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에 피부로 도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민심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꼬집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경제 문제 지적은 물론 여당과 한국당이 나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 선거제 개혁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패악 정치가 정치 신뢰마저 바닥에 내몰리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째짜미' 국회 파

행과 일사적 독단 및 독선의 허물을 벗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설 민심은 민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이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성토했다"며 "정치권은 바로 2월 국회를 열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평화정착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연휴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설 연휴, 째 짜미 일하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국회"라며 "국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하는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돼 도리어 국민의 시름이 되고 있다. 한국당의 당리당락에 더 이상 국회가 불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유성엽 의원 "넥슨 해외 매각은 국부유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맹성



과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규정하며, "게임업계 1위 대기업이 매각 시장에 나왔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자리 하나가 아쉬워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 정부가 정작 민간 대기업의 해외매각에는 손 놓고 앉아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넥슨이 실제로 해외에 넘어갈 경우 고용과 세금, 투자 등 직접적으로 상당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넥슨은 작년기준 재계 52위의 대기업으로서, 자산 총액 6조 7천 억원에 계열사를 22개나 거느린 국내 1위의 게임회사이다. 또한 국내 직원 역시 작년 기준 5,768명으로 이전 해 5,525명에서 243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온 기업이다. 따라서 민간 넥슨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인수될 경우, 당장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 등이 불투명해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유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매각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게임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책임과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한 업계의 1위 기업이 매각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를 팔겠다고 나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넥슨 매각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가능한 국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